

## 유명 병원들, 단체검진 '뒷거래'

광주·전남 14곳 적발... 불법 알선업체에 검진비 10~20% 제공

7 광주일보  
제17424호 2006년 4월 17일 월요일

### '추적 60분' 언론중재위 제소

크라운·해태제과 "아토피 보도 검증 안돼"

크라운제과와 해태제과는 16일 식품첨가물이 아토피를 유발한다는 내용의 KBS 추적60분 방송과 관련해 언론중재위원회에 정정, 반론보도 청구를 했다고 밝혔다.

크라운·해태제과는 '추적60분-과자의 공포, 우리 아이가 위험하다' 편이 사실과 다르거나 의학적, 과학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내용을 보도했다고 주장했다.

크라운·해태제과 이외 농심·오리온·롯데제과 등은 이번 언론중재위 반론보도 청구에 동참하지 않았다.

/서민정기자 viola@kwangju.co.kr

### 경찰, 조선대병원 등 10곳도 수사

대학병원 등 광주·전남의 유명 의료기관이 불법 알선업체와 짜고 단체 건강검진을 실시했다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전남지방경찰청은 광주·전남 14개 병원이 건강검진 불법 알선업체인 A·E사 등 2곳과 계약을 맺고 건강검진비의 10~20%를 수수료로 제공한 혐의가 있어 조사 중이라고 16일 밝혔다.

경찰은 이 중 ▲미래로 21 ▲기독병원 ▲시월병원 ▲첨단병원 등 광주 병원 4곳 관계자를 의료법 위반혐의로 입건하고, 조선대병원 등 나머지 10개 의료기관에 대해서도 수사를 계속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 병원들은 알선업체

로부터 관공서 및 기업체 건강검진 대상자들을 소개받아 수 백만~수 천만 원의 영업이득을 올렸으며, 그 대가로 건강검진 수가(1인당 평균 25만원)의 10~20%에 상당하는 수수료를 건네주었다는 것이다.

광주 미래로 21 병원의 경우 지난 2004년 9월부터 12월까지 한국 3M 소속 직원 295명의 명단을 A 알선업체로부터 전달받아 4천200여만 원의 수익을 올리고 이 중 10%인 400여만 원을 업체에 썼다가 입건됐다.

이 병원 관계자는 경찰에서 "원래 단체 건강검진 비용인 25만원에서 4만원

할인된 21만원으로 계약을 체결했다"며 "할인된 금액으로 건강검진을 해도 이익을 낼 수 있을 것 같다"고 진술했다.

시월병원은 960명의 단체 건강검진을 실시, 1억5천700만원을 벌었으며 이중 1천700만원을 업체에 전달했다. 이외 광주 기독병원·첨단병원도 각각 191명, 289명을 소개받아 4천여만 원의 영업이득을 봤다.

특히 3차 의료기관인 조선대병원도 두 곳의 알선업체와 계약을 맺고 14명의 명단을 제공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외 ▲무지개의원(광주) ▲한국연합의원( ) ▲한국병원(광주·목포) ▲하남성심병원(광주) ▲오병원(순천) ▲성심병원(여수) ▲연합의원(여수) ▲목포 기독병원(목포) 등도 알선업체를 통해

건강검진을 한 혐의가 포착돼 조사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일부 병원은 알선업체에 준 돈을 보전하기 위해 몇 가지 검진항목을 제외하거나 변경하고, 낮은 단가의 시약을 사용했으며, 검진기간을 단축시키는 편법을 써왔다"며 "결국 건강검진 서비스의 질이 떨어지고, 업체에 준 돈도 환자들이 고스란히 부담하는 결과가 됐다"고 말했다.

한편 현행 의료법(제25조 3항)은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에게 소개·알선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어길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서민정기자 viola@kwangju.co.kr

### 나원침 (6806) 김장두



## 전남대 총학, 총장실 점거

등록금 인상 반발... 4일째 농성

### 28일부터 타대학과 동맹휴업

전남대 총학생회가 대학 측의 등록금 인상 등에 반발해 지난해에 이어 또다시 총장실 점거농성에 들어갔다.

전남대 총학생회는 올 등록금 9% 인상에 반발해 이례적으로 지난 11일부터 14일 오후 2시까지 강정채 총장에 대한 불신임 투표를 한 데 이어 14일 오후 7시 총장실을 점거, 농성 중이다. 총학생회는 지난해 5월에도 등록금 인상분 반환을 요구하며 40여일 동안 총장실 점거농성을 벌였다.

총학생회는 대학 측에 5가지 요구사항 수용을 요구하고,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무기한 점거 농성과 학생회 간부의 단식 투쟁을 병행한다는 방침이다. 총학생회의 요구사항은 ▲등록금 동결 및 인상분 환불 ▲국립대 법인에 대한 반대 입장 표명 ▲학생회 참여 확대 등 대학의 민주적 운영 ▲학생복지요구안 수용 ▲교육재정 6% 확보 등이다.

총학생회는 이날 점거농성에 앞서 총장 불신임 투표를 재적인원 1만7천991명(여수캠퍼스 제외) 중 9천291명(51.6%)이 참가, 89.4%인 8천305명이 '불신임'에 찬성했다고 밝혔다. 또 오는 28~29일 전국 교육대책위원회 등이 등록금 인상에 반대해 추진 중인 대학동맹휴업 참가 찬반 투표에도 82.6%인 7천673명이 찬성했다고 덧붙였다.

대학 측은 그러나 총학생회의 요구사항을 전면 수용할 수는 없다는 입장이다. 먼저, 등록금 인상분 반환에 대해 2006년도 기성회비 인상은 학생 정원

10% 감축과 세입 감소에 따른 불가피한 조치였다는 주장이다.

대학 측은 특히 학생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총장 업무수행 경비 10% 삭감, 기관 운영경비 및 교직원 경비 10% 감축 등 기성회비 인상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강조했다.

대학 측은 또 장학금, 취업능력 제고 지원에 99억 여원을 배정하는 등 학생 복지 사업 예산을 29.1% 늘리는 등 학생부담 지원 예산이 총 195억여원으로 총 기관사업비 353억원의 55.1%에 달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학 측은 국립대 법인에 대한 공식적인 입장은 반대라고 강조했다.

### 총동창회 "학교 명예 실추" 성명

전남대 총동창회는 총학생회의 총장 불신임 투표와 총장실 점거 농성과 관련, 17일 오전 11시 30분 조국현 총동창회장장과 원로, 선배동문이 참석한 가운데 모교 총장 방문 행사를 갖는다고 16일 밝혔다.

총동창회는 또 이날 앞서 배포한 '재학생들에게 보내는 선배 동문의 고언'이라는 성명서를 통해 "대학의 총장은 재학생뿐 아니라 16만 동문의 위상과 명예를 대표하는 우리의 얼굴이며 자존심"이라며 "선배들은 더 이상 일부 학생들이 모교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황태종기자 hwangtae@kwangju.co.kr /이승배기자 lsb54@kwangju.co.kr



### 봉축탑 점등

다음달 5일 '부처님 오신 날'을 앞두고 부처님의 지혜와 등을 밝히는 '부처님 오신 날 기념 연등축제 봉축탑 점등식'이 지난 15일 '광주·전남 봉축위원회' 주관으로 옛 전남도청 앞 광장에서 열렸다. 이날 행사에는 천운스님(대흥사 주지), 풍신스님(대흥사 주지, 광주·전남 봉축위원장), 혜향스님(광주 불교연합회장) 등 불교계 지도자 및 신도 등 600여명이 참석했다.

/위정량기자 jrwi@kwangju.co.kr



### 부활절 예배

16일 부활절을 맞아 '광주기독교교단협의회'(회장 안기영)는 광주공원 광장에서 신도 2천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생명과 화해의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주제로 연합 예배를 올렸다. 천주교 광주대교구도 이날 밤 9시30분 임동성당에서 최창무 대주교의 집전으로 부활절 미사를 올리는 등 광주·전남 지역 개신교와 가톨릭 단체의 부활절 관련 행사가 잇따랐다.

/나명주기자 mjna@kwangju.co.kr

연예2차 동림이  
**대주 피오레**  
1,300여 부지 중 353부 353부지  
문의 (062)366-4220

우체국 금고 통째로 훔치려다 '덜미'



○...완도경찰은 16일 자신이 근무했던 우체국 금고를 통째로 훔치려다 경보기 작동에 놀라 도망쳤던 40대 전직 집배원에 대해 특수절도 미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

○...경찰에 따르면 도모(34·목포시) 씨는 지난 8일 오후 3시55분께 자신이 집배원으로 근무했던 완도 모 우체국 유리창을 깨고 미리 준비해 간 망치와 그라인더로 금고 벽을 부수고 침입하려던 혐의.

○...도씨는 범행 현장에서 경보기가 울리자 재빠르게 달아났지만, 우체국 금고 통째로 훔칠 욕심에 자신이 몰고 온 1t 화물 트럭을 본 목격자들의 진술로 결국 경찰에 피리가 잡혔다고.

○...경찰은 범행 직후 완도 지역을 빠져나간 차량을 찾기 위해 원동 검문소의 차량 번호판 관측기의 녹화기록을 일일이 분석한 뒤, 같은 시간대에 검문소를 통과한 도씨의 차량을 추적해 일주일 만에 검거.

/원도=정은기자 ejchung@kwangju.co.kr